한국 무역신문
Korea Trade News

최신 무역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로 가득찬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



www.weeklytrade.co.kr 2026년 11월 9일 〈제937호〉 Tel.02-6000-3119

중국산에 속절없이 밀리는 한국 전기차 · 배터리

전기차, 2030년 수출 2.2조원 잠식 우려
배터리3사, 비중국시장 점유율 20%대로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약진으로 한국산 점유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발표한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의 급성장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2030년에는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경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중국산 배터리의 약진으로 한국 배터리 3사의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해 1~9월 20%대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한국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6년 새 4.3%p 하락 = 한경협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약 10배 확대됐다. 올해는 29%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세계 전기차 수출 점유율은 2019년 8.9%에서 지난해 4.6%로 6년 만에 4.3%p 하락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같은 기간 73.7%에서 57.0%로 16.7%p 떨어졌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Global EV Outlook 2026'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업체의 세계 전기승용차(하이브리드차 포함) 판매 점유율은 약 60%다. 중국 내수와 해외 판매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승용차 10대 가운데 6대가 중국차라는 뜻이다.

한국의 전기차 수출 경쟁력도 중국에 따라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경쟁력 지표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국 전기차가 2023년 2.92에서 지난해 1.48로 하락했지만, 중국은 2022년 1.13으로 1을 넘기며 비교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9까지 높아지며 한국을 앞질렀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한국이 높은 수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RCA는 특정 품목이 자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교역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한 지표로, 1을 넘으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쪽에 더 특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TSI)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중국의 전기차 TSI는 2017년 -0.79에서 지난해 0.97로 급등했다. 반면 한국은 2023년 0.70에서 2025년 0.50으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중국의 세계 전기차 수출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되면 2030년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 가운데 약 2조2000억 원(16억1000만 달러)이 경쟁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전기차 수출액의 14.7%에 해당한다.

●중국 배터리 상위 6사 세계시장 점유율 60% 육박 =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중국산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상위 6개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반면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20%대로 축소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약 426.7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올해 1~9월 기준 중국 CATL에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143.7GWh로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7% 늘었다. 점유율도 28.6%에서 33.7%로 높아졌다. CATL(닝더스다이)은 지난 9월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첫 시험 생산에 들어갔기에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유럽차에 대한 현지 공급 기반은 갈수록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위는 LG에너지솔루션(69.8GWh)으로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 줄었다. 점유율은 21.5%에서 16.4%로 낮아졌다. 3위는 전년 동기보다 66.8% 늘어난 배터리 사용량을 기록한 중국 BYD(비야디)다. 점유율은 10.8%다. 삼성SDI가 만든 배터리 사용량(15.0GWh)은 34.4% 줄어 상위 10개사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점유율도 6.7%에서 3.5%로 줄었다.

궈쉬안(Gotion), SVOLT, CALB, EVE 등 중국계 후발 업체의 성장세도 가팔랐다. 궈쉬안이 만든 배터리 사용량은 1~9월 17.6GWh로 153.8% 늘어 삼성SDI를 제치고 사용량 6위에 올랐다. CATL과 비야디를 포함한 중국계 6개사의 비중국 전기차 배터리 합산 점유율은 43.1%에서 56.4%로 13.3%p 높아졌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든 배터리 사용량은 합산 113.0GWh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줄었다. 합산 점유율도 38.2%에서 26.5%로 떨어졌다.

국내 3사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 감소는 북미에 집중됐다. 세액공제 종료 이후 전기차 수요가 위축된 북미 사용량이 56.1GWh에서 28.1GWh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유럽은 58.7GWh에서 63.0GWh로 7.2%, 아시아는 13.1GWh에서 17.5GWh로 33.2% 늘었다.

김영채 기자



멕시코로 수출되는 중국차 11월 1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항 둥팡(東方)항무지사 부두에서 선적 대기 중인 멕시코 수출용 중국산 자동차. 이날 원양 로로선이 둥팡항무지사 로로부두에서 멕시코로 수출할 중국산 자동차 5910대를 적재하며 운송 준비에 나섰다. 지난 2021년 9월 30일 정식 개통한 롄윈강~멕시코 로로 항로는 물동량을 꾸준히 확대하며 자동차 수출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왔다. 【중국 롄윈강=신화통신/뉴시스】

씨티 "환율, 내년 1200원대로"

한국씨티은행은 수출기업의 환전 수요가 외국인 주식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를 웃돌아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0~3개월 사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까지 하락하고 6~12개월 사이에는 127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말까지 총 약 44조1000억 원의 3분기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중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약 22조4000억 원으로 이들의 해외 송금 규모가 13조1000억 원에서 16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채 기자

방글라데시 '의류 파업', 현지 한국기업에 불똥 튀나

섬유·의류 중심 200사 진출
글로벌 의류 생산기지 역할

영원무역을 비롯해 한국 섬유의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방글라데시의 의류노동자들이 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외신에 따르면 파업은 10월 31일 수도 다카 외곽에 있는 의류제조 중심지 아슐리아에서 시작됐다. 30여 곳의 의류공장 노동자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현재의 월 최저임금 1만2500타카(약 13만 원)를 두 배 이상인 3만 타카(약 32만 원)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식료품과 주거, 교통, 보건 등의 가격 급등으로 구매력이 그만큼 줄었다며 2023년 결정된 현 최저임금으로선 살아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11월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의류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백만 노동자 파업 참여… 시위도 = 파업은 다음 날인 11월 1일 전국으로 번져 총 529개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 98만7190명이 동참했다고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는 전했다. 노동자들의 파업 열기가 높아지자 정부는 1일 노동자 대표, 업계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쳐 노동자와 사용자 측 각 2명과 정부 대표, 중립적 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임금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멈추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임금조정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한국시간 5일 현재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전날까지 시위는 계속됐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의류를 수출하는 방글라데시에서는 노동자 약 400만 명이 4000여 곳의 공장에서 일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품을 주로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수출해 연간 약 390억 달러(약 52조 2000억 원)를 벌어들인다.

●아직 현지 한국기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아 =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의류노동자 파업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를 글로벌 의류 생산거점으로 활용해 온 영원무역 등 한국계 제조업체들은 조업 중단에 따른 단기적 생산 차질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장기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한국계 공장이 실제 얼마나 가동을 중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를 보면 파업은 다카 · 가지푸르 · 아슐리아 등 중북부 산업지역에 집중됐으며,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 중 하나인 치타공(차토그램) 지역에서는 11월 1일 대규모 조업 중단이 보고되지 않았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 200개사 넘어 =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국으로, 2023년 말 기준 누적 투자 잔액은 약 14억9304만 달러였다.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200개가 넘으며, 섬유 · 의류업이 핵심 투자 분야다. 대표적인 한국 투자기업인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에서 수십 년간 생산 기반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아웃도어 의류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방글라데시 원부자재 수출에도 영향 =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산업용 섬유류(HS 59) 수출은 유엔 무역통계 기준 약 4827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 코팅 · 적층 직물(HS 5903)이 약 4277만 달러를 차지했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침체하면 한국의 직물 · 합성섬유 · 염료 · 부자재 및 섬유기계 공급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김보근 기자

K-섬유 미국행… 바이어 150개사와 213건 상담 진행

미국 아웃도어 메카 '기능성 섬유 전시회 2026 포틀랜드'에 첫 한국관

국내 첨단 섬유 소재 기업들이 나이키, 컬럼비아스포츠웨어 등 세계적인 스포츠 · 야외활동용품 기업들이 자리한 미국 포틀랜드에서 현지 소재 개발 · 구매 담당자들을 만나 차별화된 기술력을 소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와 현지시간 10월 27일부터 이틀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오리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능성 섬유 전시회(Functional Fabric Fair) 2026 포틀랜드'에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섬유 전시회는 미국과 독일의 전시 전문기업이 공동 주최하는 기능성 소재 조달 전문 전시회로, 뉴욕 · 포틀랜드 등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틀랜드 전시회는 2026/27 가을 · 겨울 시즌 소재와 유행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로, 올해도 350여 개사가 참가하고 참관객 2000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코트라가 이 전시회에 한국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관에는 기능성 섬유 · 소재 기업 14개사가 참가했다. 직물과 니트, 웨빙(띠 · 테이프), 특수사까지 아우르는 구성으로, 한국관에는 나이키, 컬럼비아스포츠웨어 등 150여 개 브랜드 · 기업 소속 바이어 190명이 방문했다.



10월 27일부터 이틀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오리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능성 섬유 전시회(Functional Fabric Fair) 2026 포틀랜드'에 설치된 한국관에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이틀간 한국관을 찾은 150여 개사 바이어들은 K-첨단소재의 기능성에 더해 K-컬처 전반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우리 기업과 구매 상담을 이어갔다. 우리 기업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 빛과 온도에 반응하며, 위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K-첨단소재 섬유를 미국 시장에 선보였다. 코트라는 참가기업이 사전 수요조사에서 희망한 구매기업과 품목별 적합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주선하고, 현장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시 기간 중 총 213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00여 건은 시제품 요청과 가격 견적 문의 등 구체적인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

눈길을 끈 곳은 특수 기능사 전문기업 위그코리아다. 보는 각도와 빛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카멜레온' 원사, 자외선과 온도에 반응해 색이 변하는 원사, 빛을 반사하는 반사사, 위조를 막는 위조방지 원사 등 재활용 소재 기반의 특수사를 선보였다. 위그코리아는 이틀간 나이키, 컬럼비아스포츠웨어, 언더아머, 뉴에라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와 28건의 상담을 소화하며, 반사 파이핑과 반사 필름 적용 등 신규 소재 개발을 논의했다. 김보근 기자

‘글로벌사우스 시장’이 떴다… 1~9월 수출 40%↑

산업화 수요에 한류 열풍 가세… 반도체 · 석유제품 앞장서고 화장품 · 바이오헬스 따르고

대한민국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글로벌사우스 시장으로 수출이 크게 늘며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세안, 인도, 중남미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 등 산업화 수요와 K-컬처 및 소비재 인기 확산이 수출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글로벌사우스 시장으로의 대한민국 9월 수출액은 32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6% 증가했으며, 같은 달 수입액은 203억 달러로 11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거점으로 부상한 필리핀,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각각 233.5%, 209.6% 급증했으며, 싱가포르(151.2%), 인도(49.6%), 태국(46.1%), 베트남(43.9%), 멕시코(29.2%)로 수출도 크게 늘었다.

글로벌사우스 시장으로의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를 보인 가운데 특히 필리핀이 가장 높은 증가세(112.3%)를 보였다. 이어 말레이시아 (107.7%), 이집트(56.5%), 베트남(55.8%), 싱가포르(53.6%), 인도(33.1%), 멕시코(32.9%) 순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0%에 달했다.

수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필리핀을 보면 누적 수출액이 1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는 필리핀이 반도체 산업 후공정 거점으로 부상하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101억 달러에 달한 덕분이다. 필리핀 시장으로는 이밖에 석유제품 43.1억 달러(58.5% 증가), 구리제품(13.0%), 회로기판(44.6%), 전력용기기(27.3%), 바이오헬스(11.2%) 수출도 호조세다. 필리핀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올해는 10위(1~9월 누적기준)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3위 수출시장인 베트남으로의 1~9월 누적 수출액도 7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8% 급증했다. 베트남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함께 아세안의 반도체 후공정 거점으로 주목받으며 반도체 수출이 408억 달러로 두 배 이상(128.8%) 급증했다. 베트남으로는 유제품(51.9%), 컴퓨터(123.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3.2%), 전력용기기(12.2%), 바이오헬스(16.9%)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완제의약품 수출이 28.3%나 늘며 K-소비재 수출품 다변화로 이어졌다.

세계 최대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표방하며 글로벌 생산기지 전략을 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9월 누계 기준 금형(21.4%), 금속공작기계(98.8%), 합성수지(21.0%) 등 산업재 수출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농수산식품(13.6%), 화장품 (25.6%), 바이오헬스(16.6%) 수출도 최근 인도에 상륙한 K-컬처 인기와 함께 호조세다.

미주 지역 제조 거점 역할을 하는 멕시코로의 수출도 1~9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32.9%, 9월 한 달 29.2% 급증했다. 멕시코의 AI 서버 및 완성차 제조 거점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1~9월 누계 기준 컴퓨터(17억1000만 달러, 707% 증가)와 자동차부품(15억7000만 달러, 7.2% 증가) 수출이 크게 늘었다. K-팝, K-콘텐츠 인기가 확산되며 농수산식품 (108.3%), 생활용품(14.1%), 화장품(68.7%), 바이오헬스(25.7%) 같은 소비재 수출도 호조세다.

●성장 중인 글로벌사우스, 제조 활성화 관련 수요 커져 = 품목별로 보면 인공지능(AI),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이 새롭게 반도체 후공정 및 제조 거점으로 각광받으며 1~9월 누적 기준 반도체(153.5%), 컴퓨터(298.3%), 석유제품(35.7%)이 글로벌사우스 국가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K-컬처 및 소비재 인기가 세계 각지로 퍼지며 화장품(28.3%), 바이오헬스(11.1%), 생활용품(4.9%) 수출도 호조세다. 현지 수요와 맞물리며 선박(22.8%), 디스플레이(10.5%) 수출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주요 품목 중 글로벌사우스 대상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디스플레이(75.8%), 선박(67.4%), 섬유(45.6%), 철강(44.4%), 석유제품(39.5%) 등이었다.

코트라는 2025년 12월 쿠알라룸푸르, 올해 7월 하노이에서 한류박람회를, 9월 말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상품전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사우스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은 수출 구조를 탄탄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재국별 산업화 수요와 K-컬처 인기를 활용해 현지 수요에 맞춘 수출 다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말레이 · 인도 시장 K-조선기자재 선점 ‘골든타임’ 왔다

코트라 · 울산시, 인도와 말레이시아에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말레이시아의 최대 국영 조선소가 이끄는 해양 프로젝트 발주 수요와 인도 정부의 대규모 조선산업 지원책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노리고 현지를 찾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10월 26일부터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인도 첸나이에 ‘울산시 말레이시아-인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에는 ▷친환경 선박 ▷해양환경 ▷설계 · 엔지니어링 ▷선박엔진 ▷선박부품 ▷기자재부품 ▷조선소재 분야 울산 기업 7개사를 포함, 총 13개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상담회를 가졌고, 이어 울산 기업들은 인도 첸나이로 옮겨 현지 조선소, 플랜트 발주처, 수입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벌였다.



코트라 울산지원본부와 울산광역시가 10월 29일 인도 첸나이에서 개최한 ‘2026 울산 말레이시아-인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에서 울산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7일 개최된 첫날 상담회에는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끄는 해군 함정 및 특수선박 건조, 해양 MRO(유지보수 · 정비) 전문 기업 루무트 해군조선소(LUNAS)가 참가해 조선 · 플랜트 기업과의 선박 기자재 발주 논의를 진행했다. 그밖에 해양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분야 현지 바이어 22개사와 31건, 1,862만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탱커 ·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과 모듈 제작, 용접 · 배관 · 밸브 기자재 납품이 유망 분야로 꼽힌다.

인도 첸나이에서 29일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SISCO Energy 등 현지 바이어 41개사와 85건, 3,249만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 인도 항만 · 해운 · 수로부는 지난해 12월 조선 · 해운 육성 패키지의 핵심인 조선금융 지원제도(SBFAS)와 조선산업개발제도(SbDS)에 47억 달러(4473억 루피)를 투입하는 조선산업 육성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8월까지 타밀나두주 투투쿠디 등 5개 그린필드 조선 클러스터가 사전 승인을 받아 앵커 조선소 선정, 사업계획 발표 등 신속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는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야드(Yard) 확장에 나섰지만 핵심 부품과 설계 역량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술력을 갖춘 우리 조선기자재 및 컨설팅 기업의 발 빠른 현지 진출이 요구된다.

김영채 기자

10월 수출 1100억 달러 돌파… 꿈의 '1조 달러' 눈앞

700억 달러 남아… 11월 하순 달성 가능할 듯
10월 반도체 비중 49%…자동차·부품 수출도 ↑


11월 5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제공】

10월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대한민국 수출이 올해 들어 10개월 동안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11월 하순 수출 1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하순 1조 달러 달성 가능할 듯 = 산업통상부는 10월 수출액이 1152억8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3.7%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 1211억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1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11월 중에 달성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700억 달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0월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1% 증가한 52억4000만 달러. 10월의 일평균 수출이 11월 중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조업일 기준 14일가량이면 1조 달러를 돌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조 달러 달성 시점은 대략 11월 19~20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이른바 꿈의 '수출 1조 달러' 국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월 메모리 수출 무려 360% 급증… 반도체 역대 2위 =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9.4% 증가한 56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0%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157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 108억9000만 달러에서 올해 501억4000만 달러로 360.5% 급증하면서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32.6% 증가한 5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496.6% 급증한 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SSD 수출은 584.3% 증가한 56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6.7% 증가한 19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아세안 지역의 생산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29.3% 늘어난 1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도 두 자릿수 증가 = 자동차 수출은 추석 연휴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 호조세 등에 힘입어 18.1% 증가한 6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이다. 내연기관차 수출은 0.4% 감소한 34억5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하이브리드차는 53.1% 증가한 20억6000만 달러, 전기차는 41.6% 늘어난 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신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5%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고차 수출은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52.2% 감소한 4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10억 달러였던 중고차 수출은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완성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한 1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선박 수출은 지난해 2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43.6% 감소한 2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물량 줄었지만 금액기준 급증한 석유제품·석유화학 =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개선으로 각각 80.0%, 27.5% 증가한 69억2000만 달러와 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 수출 단가는 t당 1323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5% 상승했으며, 석유화학 수출 단가도 36.9% 오른 t당 1465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수출물량은 석유제품이 7.5%, 석유화학이 6.8% 감소했다.

철강 수출은 주요국 무역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과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 증가 등으로 22.3% 증가한 2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반기계 수출도 미국 제조업 경기 개선과 중국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3.7% 늘어난 4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기기기 수출은 AI 데이터센터용 변압기와 전선 · 케이블 수요 증가로 74.0% 증가한 1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차전지 수출도 38.4% 증가한 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철금속 수출은 글로벌 IT ·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동 · 아연 제품 등의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37.7% 증가한 16억7000만 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섬유 수출은 글로벌 쇼핑행사와 연말을 앞둔 재고 확충 수요 등에 힘입어 24.7% 증가한 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가전 수출도 미국의 연말 판촉행사 등의 영향으로 6.4% 증가한 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 · 농수산식품 호조 = 대표적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과 농수산식품도 호조세를 보였다. 화장품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57.5% 오른 1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은 면류와 소스류 등의 호조로 11.6% 증가한 11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수출시장 다변화와 위탁생산(CMO) 계약 확대 등으로 30.2% 증가한 1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바이오헬스 모두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생활용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한 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문구 · 완구와 위생용품 수출은 증가했지만 안경 · 시계 등 패션잡화 수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대중·대미 수출 세 자릿수 증가… 아세안 역대 최대 =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3.6% 증가한 269억80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등이 호조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달 1~25일 기준 반도체 수출은 331.0% 급증했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전기기기 등 AI 관련 품목의 호조로 185.8% 증가한 2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1~25일 기준 반도체 수출은 497.0%, 컴퓨터는 816.3%, 자동차는 39.5% 증가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등의 증가로 128.0% 오른 213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월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개월 연속이다.

반면 대중남미 수출은 지난해 브라질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37.0% 감소한 29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중고차 수출 부진 등으로 31.6% 줄어든 9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김영채 기자

미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패배"… 그에게 닥칠 재앙은

청문회 · 자료제출 요구 직면
관세 · 통상정책은 변화 한계



11월 4일 미국 뉴욕의 한 편의점 앞 가판대에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블루쓰나미'라는 제목의 신문이 진열돼 있다. 【뉴욕=AP/뉴시스】

미국 민주당이 11월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하며 연방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한국시간 4일 오후 10시 현재 민주당은 상원 54석(무소속 포함, 미개표 2석), 하원 231석(65석 미개표)으로 모두 과반을 확보했다. 미국의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동시에 '트럼프의 패배'다. 내년 1월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정책은 지속될 수 있을까.

●트럼프에게 닥칠 재앙, 조사와 인사 봉쇄 = 트럼프에게 가장 먼저 닥칠 변화는 조사와 인사 봉쇄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대통령의 권력이 인사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다면, 우선 이 부분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상원의 인준권은 하원만 장악했을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트럼프가 충성도 높은 인물로 장관이나 고위직을 교체하려 해도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다. 연방판사와 대법관 결원이 생길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은 권한대행 등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법적 · 기간상 제약을 받는다.

가족과 측근에 대한 조사는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의 연결고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해외 사업 · 투자 유치와 외교적 양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관세 예외나 정부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이 조사 쟁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회사나 아들, 사위의 특혜나 이권 개입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조사권을 얻는다고 모든 금융자료와 대통령 관련 문서를 즉시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 조사에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필요하고, 대통령 개인 자료를 요구할 때는 권력분립에 따른 추가 심사를 받는다. 백악관의 불응과 소송이 이어지면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의회 조사와 형사 수사 · 기소 역시 별개다.

●레임덕 불가피… 관세정책은 지속될 듯 = 레임덕은 빨라지겠지만, 정책 전반이 동시에 마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2029년 1월)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 패배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요구보다 자신의 재선과 2028년 대선 구도를 더 의식하게 됐다. 선거 패인을 물가와 관세, 전쟁 비용으로 판단하는 의원들이 늘수록 대통령과 거리를 둘 유인이 커진다. 레임덕의 강도는 공화당 이탈 규모에 달려 있다. 공화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지켜주면 트럼프는 민주당의 정책 변경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도 새 정책을 법으로 만들기 어렵고,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법으로 뒤집기 어려운 교착이 형성될 수 있다.

상원에서는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모든 법안을 독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입법에서 막힌 대통령이 외교 · 행정명령 · 규제 · 통상조치에 더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약화가 대외정책의 온건화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관세정책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근거별로 봐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한 관세 정책은 의회 다수당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종료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축소하거나 의회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거부하면 양원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류하느냐가 실질적인 분수령이다.

예산도 압박 수단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민주당은 관련 기관 예산이나 필수 지출법안에 조건을 붙여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안 역시 대통령과 타협해야 하며, 기관 예산을 줄인다고 관세의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상정책 선별적 완화… 대외정책 장기 집행 능력 약화 = 가장 현실적인 통상정책 변화는 '전면 철회'보다 '선별적 완화'로 분석된다. 민주당도 단일한 자유무역 진영은 아니다. 소비자와 수입업체의 부담을 낮추려는 의원들과 제조업 · 노조 보호를 중시하는 의원들의 이해가 다르다. 다만 미국 내 물가와 생산비를 높이는 소비재 · 중간재 관세, 동맹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충돌에 대해선 민주당이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역시 선거 패배 후 물가 부담을 낮출 필요를 느끼면 일부 관세를 줄이거나 예외를 확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새로운 통상 갈등을 만드는 선택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보조금 등에 대응하는 선별적 보호조치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대외정책 전반에서 장기 집행 능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협상, 법률이 허용하는 제재 · 수출통제 등에서 여전히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군사작전, 대규모 해외 지원, 새로운 재정 지원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합의는 의회의 협조가 중요해진다. 의회는 관련 예산과 법률, 인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코트라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박은 지속될 것" = 한국 입장에서는 "민주당 승리로 미국 관세가 곧 내려간다"는 기대보다, 품목별 관세의 법적 근거와 미국 내 이해관계 변화를 추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제조업의 비용, 소비자 물가, 동맹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의회와 행정부 양쪽에서 예외·완화를 설득할 여지가 커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주타깃으로 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 대외투자 규제도 기존 제도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는 민주당의 신규 입법 추진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 강화에 따라 기업별 수출 ·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미 수출기업, 미국 현지 투자기업 등이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서도 향후 입법 · 행정조치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오송에서 AI와 바이오를 잇다… 연구부터 투자까지

마이스를 만나다

WBIO 2026 오송



WBIO 2026 포스터

바이오 연구 · 생산 거점인 충북 오송에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신약 개발과 임상 연구, 규제 정책, 투자와 기술이전을 연결해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6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션 오송(WBIO 2026)'이 11월 24 · 25일 이틀간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린다. 청주오스코, CJB 청주방송, 프리미어플랜이 주최 및 주관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에는 국내외 바이오 분야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 병원 · 정부 관계자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털(VC), 연구기관 등 100여 개 기관 · 기업이 참여하고, 연사와 좌장으로 국내외 전문가 30여 명이 나선다.

주최 측은 "WBIO는 AI 기반 바이오 혁신과 글로벌 협력, 정책 연계를 중심으로 학술 논의를 실제 기술이전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 AI 신약 개발부터 글로벌 임상까지

행사는 AI와 바이오의 융합을 통한 기술 중심 바이오 생태계의 미래를 조명한다.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오 전주기 디지털 전환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파트너링과 정책 논의를 통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요 분야는 AI · 디지털 헬스, 바이오의약, 정책 · 규제, 글로벌 B2B 파트너링이다.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과 데이터 통합, 분산형 임상시험(DCT)을 비롯해 차세대 모달리티,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마커 기술 등을 다룬다. 한 · 일 글로벌 임상 협력과 인허가 및 규제도 주요 의제다.

기조 강연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나선다. 서울대병원 장인진 · 이승환 교수, 충북대병원 박민규 교수, 일본 기타사토대 구마가이 유지 교수, 타이메이 테크놀로지의 케빈 이밍 루, 문한림 대한임상약리학회장 등이 주요 연자 및 좌장으로 참여한다. AI를 접목한 신약 후보물질 도출과 개발 기간 단축, 한 · 일 초기 임상시험 규제 경로 혁신,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과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다.

● 학술 · 투자 · 스타트업 세션으로 사업화 지원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기조강연 · 개막대담으로 행사의 문을 연다. 글로벌 제약 · 바이오산업의 흐름과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AI 도입에 따른 바이오 · 헬스케어산업의 변화와 민 · 관 · 학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오후에는 전체회의(Plenary Session)와 학술 세션(Scientific Session)을 통해 임상약리학과 신약 개발 동향,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기술 혁신전략을 다룬다. 국내외 유망 바이오 기업의 혁신 사례와 산 · 학 · 연 협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도 소개한다.

25일에는 심층 학술 세션과 투자 세션을 진행한다. 투자 세션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간 투자 연계 전략, 기술특례 상장과 투자 동향,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스타트업 세션에서는 AI 신약 발굴, 차세대 모달리티(ADC · TPD),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진단 분야 4개사가 기업설명회(IR)와 기술 발표에 나선다. 글로벌 벤처캐피털 · 빅파마와의 1:1 기술이전 · 투자 파트너링도 마련해 연구 성과가 사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미래인재 · 지역기업까지 교류의 폭 확대

지역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첫날 열리는 '바이오헬스 미래인재 워크숍'은 충북 RISE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신약 개발 · 임상 연구의 기초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전문가의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AI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사례를 통해 진로와 성장 방향을 탐색한다.

둘째 날 '바이오 뷰티 과학 세션'에서는 K-뷰티와 웰니스 푸드 분야의 글로벌 소비 · 콘텐츠 트렌드, 크리에이터 기반 시장 진출을 다룬다. 코스메카코리아, 노바렉스, 콜마비앤에이치 등 충북 지역 선도기업의 해외 진출 · 브랜딩 · 유통 현안을 공유한다. 행사 주최 측은 청주오스코의 컨벤션 인프라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의 연구 · 산업 기반을 연결해 이 행사를 학술과 정책, 비즈니스가 함께 작동하는 국제회의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준배 기자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션 오송(WBIO 2026)'이 11월 24 · 25일 이틀간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린다. 국내외 바이오 분야 산 · 학 · 연 관계자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행사가 열리는 청주오스코 전경. 【사진=청주오스코】

WBIO 2026 주최 측에게 묻다

Q. 행사의 가장 큰 특징과 자랑거리는.

AI 기술 융합과 글로벌 학술 · 정책 교류를 결합한 국제 컨퍼런스다. 청주오스코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국제회의로서 오송의 첨단 바이오 인프라와 직결된다.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 정부 기관이 밀도 높게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Q. 첫 행사를 준비하며 특히 주력한 부분은.

AI 기반 바이오 전주기 디지털 전환과 한 · 일 글로벌 임상, 규제 분야의 논의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데 힘썼다. 글로벌 VC 그리고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투자 파트너링도 내실 있게 준비했다. 학술적 논의가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획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참가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논의는.

AI를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 도출 기간을 줄이는 플랫폼 연구와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정 혁신 등이다.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선도적 연구와 인허가 규제 대응, 글로벌 파트너링이 선순환하는 지능형 바이오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Q. 추천하는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첫 행사인 만큼 많은 부대행사를 운영하기보다 국제회의 본연의 성격에 집중했다. 대한임상약리학회와 한국의약화학회 등 학술단체,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 라이즈(RISE) 사업단 등의 참여 · 협력으로 주제를 다채롭게 구성했다. 산업 · 기술 현장 방문에 도시 관광을 접목한 'WBIO 바이오 유산 · 기술 탐방(WBIO Bio-Heritage & Tech Tour)'도 운영할 계획이다.

Q. 오송에서 개최하는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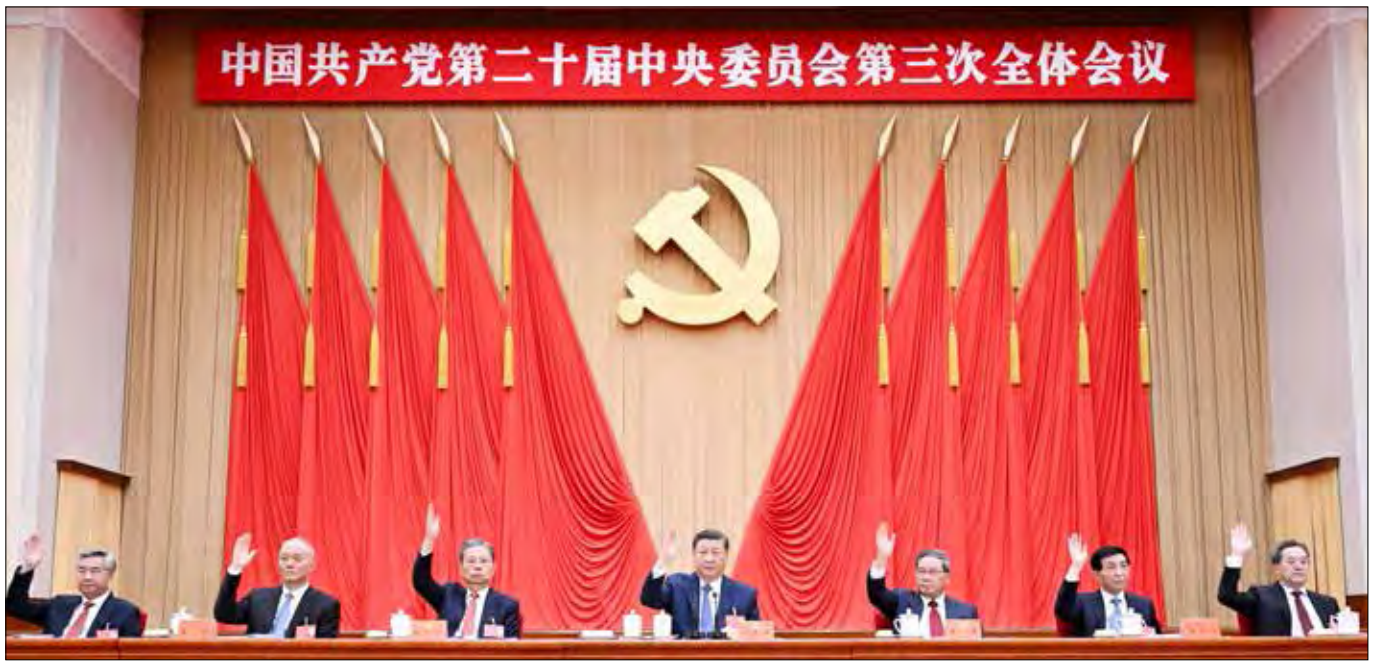
오송은 국책기관과 연구소, 임상병원 등 바이오 생태계와의 접근성이 강점인 곳이다. 학술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리서치와 연구기관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마이스 산업과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입체적인 국제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Q. 향후 발전 계획과 비전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처럼 아시아 바이오산업의 미래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 · 기술 교류의 랜드마크 국제 컨벤션으로 브랜드화하겠다. 단계적으로 K-바이오 연구자와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글로벌 패스트트랙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준배 기자

시진핑의 당 건설사상: 함의와 한국에 가져올 변화는?





10월 26~29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이름 한 글자가 바뀐 이유

중국을 오래 연구한 전문가라면 공식 문서의 단어 하나에 담긴 무게를 안다. 지난 10월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공보가 그랬다. 공보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건설 이론을 "시진핑 당건설 사상(習近平黨建思想)이 형성됐다"고 규정했다. 2023년 전국조직공작회의 때만 해도 이 이론의 공식 명칭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 건설에 관한 중요 사상'이었다. 3년 만에 '중요'라는 수식어가 빠지고 지도자의 이름이 앞에 붙은 독립 '사상'으로 올라선 것이다.

국내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포함한 33명의 당적 박탈, 그리고 2027년 하반기 제21차 당대회 개최 확정에 쏠렸다. 하지만 이번 전회의 진짜 무게중심은 이 '사상'의 격상과, 함께 채택된 '전면적 종엄치당 지속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 있다. 겉으로 드러난 숙청의 숫자보다, 그 숫자를 설명하는 이론의 틀이 앞으로 10년 중국의 통치 방식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보의 행간에 숨은 세 가지 함의와 그것이 한국에 가져올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마오쩌둥과 나란히 선 '자기혁명'이다. 공보는 왕조의 흥망이 되풀이되는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날 답으로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다. 1945년 마오쩌둥이 제시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게 하는 것"과 시진핑 시대의 "자기혁명"이다. 외부 견제가 아니라 당 스스로의 정화를 장기 집권의 근거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당은 감독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독하는 주체가 되고, 그 정점에 총서기가 선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권력 구조와도 곧바로 이어진다. 21차 당대회를 1년 앞두고 독자 사상을 공식화한 것은 지도자의 이론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토대다. 동시에 후계 논의가 당분간 수면 위로 오르기 어렵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둘째, 측근도 예외가 아니다. 당적 박탈 명단에는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뿐 아니라, 시 주석의 군 내 핵심 측근이던 중사오쥔 전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도 들어갔다. 충성의 대상은 인맥이 아니라 당중앙과 그 핵심이라는 메시지다. 과거 중국 정치에서 파벌과 개인적 인연은 일종의 보호막이었지만, 이제 그 보호막은 사라졌다. 결정문이 당성 강화를 '근본 과제'로 규정하고 당에 대한 충성 교육을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전회 출석 위원은 279명으로, 2022년 선출 당시 376명의 74% 수준에 그쳤다. 엘리트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관료들은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는 정책 집행의 속도와 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 관료를 향한 칼날이다. 진좡룽 전 공업정보화부장과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제명되고, 리원쩌 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직위 해제됐다. 산업 · 금융 정책의 수장들이 한꺼번에 처분된 것이다. 당 건설이 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 거버넌스의 심장부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다. 결정문은 1억 명이 넘는 당원과 540만 개 이상의 기층 조직을 '조직적 우위'로 내세우며 신흥 영역의 당 건설도 강조했다. 공보는 '올바른 정치업적관' 교육과 '일인지' 권한 행사의 규범화를 강조했다. 성장률 숫자와 출혈 경쟁, 이른바 '내권(內卷)'에 매달려 온 지방 관료의 행태를 당 기율로 다스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처벌을 두려워한 관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躺平)'으로 숨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가져올 변화와 엇갈리는 평가

세 가지 함의를 종합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일어날 변화의 윤곽이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2027년 21차 당대회를 향해 권력의 정점 집중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순시와 기율검사 · 감찰을 축으로 한 상시 감독 체계가 공직 사회 전반을 촘촘히 덮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산업 · 금융 정책이 시장 논리보다 당의 정치적 판단에 더 강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평가는 엇갈린다. 중국 당국과 지지자들은 거대 집권당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처방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공보는 당이 직면한 '4대 과제와 도전(집권 · 개혁개방 · 시장경제 · 외부환경)'과 '4대 위험(정신적 나태 · 능력부족 · 대중으로부터 이탈 · 소극적 부패)'이 매우 엄중하다고 적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외부 견제 없는 자기감독의 한계를 지적한다. 반부패가 권력 재편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고, 승계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향후 중국 경제의 성과와 권력 이양 과정이 판가름할 것이다.

●한중관계: '복원'의 문법이 달라져

한중관계는 지금 복원의 한가운데 있다.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고, 양국은 1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협상의 진전,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 문화 · 콘텐츠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문제는 이 복원이 앞으로 '시진핑 당건설 사상'으로 무장한 더 집중된 체제와 마주하며 진행된다는 점이다.

첫째, 대중 외교는 정상과 최고위급의 신호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는 양날의 칼이다. 최고지도부가 결심하면 문화교류 제한 완화나 핵심광물 공급 같은 현안이 빠르게 풀릴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 신호가 어긋나면, 2016년 사드 사태 때처럼 공식 발표 없는 경제 보복이 전방위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당의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조치'의 집행력도 함께 커진다.

둘째, 경제의 안보화가 심해질 것이다. 2025년 10월 중국은 미국의 301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기업이 압박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당이 '국가안보'와 '기율'의 언어를 앞세울수록, 통상 문제가 정치 · 안보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커진다.

셋째, 군 지도부 교체는 해양 현안의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서해 구조물 문제처럼 군과 해경이 얽힌 사안에서, 기존에 쌓아 온 소통 채널의 상대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군사 소통 채널을 새로 다져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일은 아니다. 이달 18~19일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5중전회 이후 중국이 처음 맞는 대형 다자무대다. 21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대외적으로 '안정된 개방'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복원의 성과를 제도로 굳힐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셈이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미국 듀크대학 교환교수(2012년)를 지냈고, 미주리주립대학에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2023년)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무역은 리스크 관리다

새콤달콤 재미있는 무역리스크 비책 ㊸

품질 불량품 수령 시 대처 방안

독일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한 A사. 단가가 15만 달러인 기계를 10대 수입했으니, 총액은 150만 달러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더구나 계약 협상을 시작할 때 달러당 1300원 대이던 환율이 1500원 대 중반에서 맴돌고 있어 실질적인 가격 부담은 더 높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덫은 환율이다. 통상 의료기기 결제조건은 연불(외상)인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에는 항상 환율 변동성이라는 폭풍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성능 미달 제품 손해보상방법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하는 포인트는 성능 미달인 제품이 도착할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시 분쟁을 상정하지 않는다. 특히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 거래할 경우 품질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도 한다.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유명브랜드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품질이 중요한 정밀기기일수록 기업의 명성을 떠나 품질 클레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품질불량을 보상받는 다양한 방법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

계약서에 품질 불량 시 보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상황을 선제적으로 다 담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근거로 다양한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절실하다.

우선, 해당 거래가 CISG 적용대상인지 살펴야 한다. ① 소재지가 다른 국가에 있는 영업소(법인)간 거래 ② 거래대상이 상품 ③ CISG 비준국가 ④ 당사자간에 CISG 배제 조건이 없을 것 등이다. 앞의 거래사건은 의료기기로 상품이고 독일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CISG 체약국이다. 또한 별도로 계약 당사자간에 CISG 적용배제를 하지 않았으니 CISG를 기준으로 품질불량 제품 보상방안을 미리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다.

●대체물품 청구권 행사

무역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자 물품에 대해 대체물품을 청구하는 것이다. CISG 46조 2항에 의해 계약에 부적합한 물건(부적합함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적합 통지와 대체물품인도 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함)을 수령한 수입상은 대체물품을 청구할 수 있다.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일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일부 부품에 약간의 손상이 있고 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된다면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런 경우 대체물 청구권의 행사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ISG 46조 3항에 따라 하자를 치유(수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수리에 대한 청구도 합리적인 기간에 행하여져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과 함께 유의할 점은 수입상이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적합함을 주장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한다는 점이다. 다만, 계약서상에 별도로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 거래의 상법 및 민법상 하자처리 기간과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자치유 기간도 명시해야

품질이 불량한 상품을 수령한 수입상은 대체물품을 인도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하자 치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CISG 47조) 부가기간 중에 수입상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수출상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즉, 수출상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수출상이 대체물품을 공급하고 하자를 치유하는 등 수입상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경우에도 수입상은 하자 없는 상품을 제때 인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이나 작업손실, 또는 대체물품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범위는 모든 손실이 아니라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중 수출상이 예견할 수 있는 손실로 제한된다. 또한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기대했던 물품의 품질가액과 차이에 대해 비례적으로 물품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만일 수출상이 계약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권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의무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참고1〉 CISG 46조

(1) The buyer may require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unless the buy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2)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nly if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a request for substitute goods is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cl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3)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the seller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A request for repair must be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cl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구제수단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물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대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물 인도의 요구는 제39조의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목적물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지 않은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리(보수)를 통해 계약부적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 요구 역시 제39조의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참고2〉 47조

(1) The buy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buy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sell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 is not deprived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가기간을 정하여 줄 수 있다. ② 매도인이 그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로 인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최용민
최용민무역통상연구소장
광운대 · 숭실대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초보 수출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 무역유관기관들



초보 무역업체들은 아직 수출입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 안으로는 숙달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밖으로는 해외 마케팅 관련 정보나 노하우가 없어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친다. 이럴 땐 무역유관기관들을 이용해 보자. 무역유관기관들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객인 무역업체들이 방문하길 기다리고 있다. 무역유관기관들은 크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출입 정책을 만드는 정부부처들

먼저 수출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부 부처로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다. 이들 중앙 부처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전체 산업과 경제, 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정해 집행 및 관리하도록 한다.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살펴보면, 산업통상부는 산업발전과 무역증대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다. 조직 내에 외국과의 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와 무역위원회가 있다. 무역지원과 관련해 무역보험이나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수출바우처 사업 중견글로벌 지원이나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이 산업부 소관이다.

산업부가 산업, 자원, 통상 전반과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주무부처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주무부처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그리고 각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등의 업무가 있다.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이 무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세 징수, 관세환급, FTA 활용, 밀수 단속 등이 무역 관련 대표적인 소관업무다. 특허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특허출원을 돕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한다.

광역지자체 중심 수출지원 활용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지자체와 시, 군, 구 등의 기초지자체로 구분된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예산과 중앙부처에서 배정받은 예산으로, 기초지자체는 자체 예산과 광역지자체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으로 각각 무역 및 통상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각 지자체의 수출입 지원사업은 대체로 각 지자체에서 만든 중소기업지원기관들, 예컨대 ○○경제과학진흥원, ○○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수행된다.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나 KOTRA 지원단, 지역 상공회의소, 지방중소벤처기업진흥원, 지역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등을 통하기도 한다.

수출입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보통 지자체 통상관련 홈페이지나 각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공고되므로 즐겨찾기에 저장해 두고 매일 확인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통상지원 정책이나 제도, 공고 등을 안내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충북해외마케팅시스템(CBGMS)에 접속하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참가, 해외전시상담회 참가, 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 · 홍보,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트레이드코리아 입점 및 마케팅, 해외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UN조달시장 진출 충북지원사업,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충북 수출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등 각종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지원기관 무역협회와 KOTRA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제외한 무역유관기관들은 대부분 협회 및 단체들과 무역 관련 공기업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한국무역협회와 KOTRA다. 무역협회는 무역업체들이 만든 민간 이익단체이고 KOTRA는 정부가 무역진흥을 위해 만든 공기업이다. 무역협회의 재원은 회원사 회비와 각종 임대소득 등 자체 수입원이고, KOTRA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2026년 10월 28~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6년 충북무역상품전이 열렸다. 이 행사는 충청북도가 도내 기업 40개사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전시상담회다.
【사진=한국무역신문 DB】

무역협회는 7만여 무역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4단체 중 하나로 특히 초보 수출업체들이 반드시 알고 이용해야 할 무역유관기관이다. 무역협회는 연회비 15만 원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되는데, 정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업체당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이다. 정회원은 무역진흥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각종 바이어 알선 사업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회원사 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여기에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이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부터 관세사 수수료까지 10여 가지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운송, 통번역 등 무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할인서비스도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KOTRA는 수출 진흥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공식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다.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주로 산업부로부터 무역 관련 사업들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KOTRA는 해외에 10개 지역본부와 132개의 무역관을 운영하며, 이 무역관들은 전 세계 86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무역관들로부터 무역정보들을 수집해 〈해외시장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해외 시장조사, 해외지사 설치 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에 지사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무역관이 지사 역할을 대신하는 지사화사업은 KOTRA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은 수출바우처 사업도 담당한다.

무역보험공사와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 '수출 · 수입보험제도'를 전담 ·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또 수입보험은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수입업체가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바이어 등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비롯해 해외채권 회수 등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기부 산하 공기업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용 지원, 지역특화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KOTRA 사업 중 해외지사화 사업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 준다.

이밖에 섬유산업연합회나 자동차공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편집팀

남독공자의 신(新)서해만리

“모두가 공유한 착각은 현실이 된다”



대통령의 말은 원래 의도보다 훨씬 멀리, 강하게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퍼져 나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촌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느라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온라인커뮤니티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산모를 우대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제도의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주 배경 시민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이 가득하고 조회수가 62만 회를 넘긴 인용글이었습니다.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차별을 막는 정책은 필요하되 특혜나 내국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 해명은 불을 끄기보다 ‘다문화가정’과 ‘내국인 가정’을 맞세우는 구도에 불을 지폈습니다. 댓글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거나 국적을 얻고 잠적한다는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그의 지지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대통령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그러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반이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설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건강한 공론장이 아니라 편견과 혐오가 가득한 난장판이 되는 과정입니다.

부랴부랴 수습이 따랐습니다. 청와대는 문제 제기의 취지가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의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도 외국인이 아니라 농어업 일자리의 질이 핵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특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 홍성이 약 5%, 울산 북구가 1%대, 옛 전남 지역 7곳이 4.8%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차상위 계층인 경우가 적지 않고 친정이 해외라 산후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같다고 돌봄을 받을 형편까지 같지는 않다”는 이주민센터 대표의 말이 이런 사정을 요약합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이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집에서 몸조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용할 만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회원이 많다는 호소까지 더하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할 판에 지원 축소를 검토한다는 억울함이 이해됩니다.

공공 지원의 우선순위는 수시로 점검해야 마땅합니다. 지자체마다 제도가 다르니 현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도 옳습니다. 문제는 순서와 방식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혐오 섞인 온라인 글을 인용하자 방향이 가리켜졌고 소수자는 ‘역차별’의 범주 안에 가두어졌습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 국적의 내국인이라는 사실은 뒷전이었습니다. 복잡한 사회구조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면 정책 목표는 유실된 채 갈등만 증폭됩니다.

권력이 클수록 신호는 강합니다.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자리에서 나온 말이 배제와 혐오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해명이 아니라 태도 변화로 답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약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차별을 멈춰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이 ‘차별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정답’ 대신에 눈을 감고 편한 길을 따라가곤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빠르게 달리는 사회’에서는 편 가르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극심한 경쟁 구조와 승자독식의 법칙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에서, 약자들이 받는 차별을 천천히 살피며 같이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고, 차별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믿음과 착각이 지속된다. ‘모두가 공유한 착각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말이다.

– 차별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들(정회옥/위즈덤하우스/2025.5), 221쪽



최영진의 풍경 강가에서

너의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고 있니? 〈사진가〉

Global Market
한국무역신문 제937호
www.weeklytrade.co.kr
2026년 11월 9일

일본 인구 과반이 50세 이상… 중위연령 50 넘어서

일본 인구의 중위연령이 처음으로 50세를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보도했다. 인구의 과반이 50세 이상이 됐다는 의미다. 2025년 일본 인구주택총조사(국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중위연령은 50.5세로, 2020년 직전 조사 때의 48.5세보다 2세 높아졌다. 일본의 중위연령은 1975년에는 30.6세였던 것이 반세기 만에 20세 가까이 높아졌다. 해당 통계에는 일본 거주 외국인도 포함한 것으로 일본인만 보면 중위연령은 51.1세로 더 높아진다. 닛케이는 '55세 정년'이 일반적이었던 50년 전에는 30세 이상이면 연장자로 분류됐지만, 이젠 50세를 조금 넘은 나이라면 '젊은 층'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연합뉴스

홍콩 · 페루 FTA 발효…한국 기업 중남미 진출 기회

홍콩 거점 활용해 페루시장 진출
디지털·프리미엄 시장 공략 기대



내 돈 내놔라 11월 3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시민들이 지급 능력 위기로 중앙은행에 압류된 우에노 은행과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부실 위기를 겪고 있는 디지털 은행 '우에노'에 대한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아순시온=AP/뉴시스】

페루는 홍콩의 주요 중남미 교역 파트너로, 2025년 두 지역 간 상품 교역액은 6억400만 달러였다. 홍콩은 페루로부터 채소 · 과일, 비철금속,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등을 1억8700만 달러어치 수입했고 수출은 대부분 재수출이다. 통신기기,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처리기, 전문 · 과학 · 제어용 기기 등을 중심으로 4억1500만 달러, 전체 수출의 99.6%를 차지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배경 = 홍콩 정부는 2022년 11월 페루와의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협상은 2023년 1월에 시작돼 2024년 7월 타결됐으며 같은 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공식 체결됐다. 양측이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한 후 두 지역 간 FTA는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됐다.

FTA와 병행해 투자촉진·보호협정(IPPA) 협상도 타결돼 양측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체결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FTA에 더해 투자 자산의 부당한 수용 방지, 투자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공식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추가적인 투자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FTA 효과와 평가 = FTA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전자상거래 포함),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협력, 분쟁 해결 등 7대 주요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해외 진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투자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한다.

홍콩 정부는 홍콩–페루 FTA를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 심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홍콩 상무경제발전국(CEDB)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14년 발효된 홍콩–칠레에 이어 홍콩이 중남미 경제와 맺은 두 번째 FTA로, 홍콩–중남미 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홍콩–페루 FTA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자상거래 및 기타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홍콩 무역업체와 투자자들이 페루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페루를 거점으로 다른 중남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홍콩–페루 FTA는 홍콩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홍콩총상회(HKGCC) · 홍콩공업총회(FHKI) · 홍콩중화공업협회(CMAHK) 등은 중국과 페루를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 홍콩의 중남미 지역 내 경제 · 무역 활동 기반을 넓히고 홍콩을 글로벌 고부가가치 공급망 서비스 허브로 격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페루가 중남미의 교통 허브이자 칠레 · 콜롬비아 · 멕시코 · 페루 등 4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태평양동맹(PA) 회원국이라는 전략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만큼 홍콩이 다른 PA 회원국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선례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기업 시사점 =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에 페루와 FTA를 체결했지만 홍콩–페루 FTA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을 더욱 다변화할 수 있는데 우선 홍콩 내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공급망 최적화가 가능하다. 한국 모회사는 자동차 · 가전 · 산업 원자재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기존 한–페루 FTA의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홍콩 법인을 통해 150여 개 분야를 포괄하는 홍콩–페루 FTA의 서비스 · 디지털 시장 개방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혜택을 결합할 수 있다.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홍콩의 글로벌 디지털 금융 · 물류 인프라가 융합되면 중남미 수출 전략을 고도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콘텐츠, 게임, 전자상거래 기업은 홍콩 공업무역처의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인증을 취득해 페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홍콩–페루 FTA의 서비스 및 디지털 무역 규정을 활용해 비관세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제도적 보호 속에서 중남미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한국 브랜드는 홍콩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활용해 페루 프리미엄 시장을 공동 개척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양측 간 상호 호혜적인 전자상거래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홍콩 현지의 물류망, 온라인 플랫폼, 전문 운영 대행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 홍콩무역발전국(HKTDC)에 따르면 페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전자 소비재(84%)이며 퍼스널 케어 및 뷰티 제품도 유망하다.

우리 기업은 홍콩의 국제 금융 및 전문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자산과 글로벌 투자를 위한 법적 보호망을 구축할 수 있다. 홍콩–페루 FTA에 따라 페루는 법률·회계·경영 컨설팅 등 150여 개 전문 서비스 분야를 홍콩에 개방했으며 홍콩 전문 인력이 페루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보장도 제공한다. 한국 기업은 홍콩을 통해 페루 시장 자유 진출 권한을 갖춘 전문 서비스 기관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홍콩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에 국제 수준의 세무·재무 기획, 지적재산권(IP) 보호, 국제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이 페루와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 정치·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KOTRA 무역관은 "홍콩–페루 FTA가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은 이번 협정의 최신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며 "특히 향후 발효가 예상되는 IPPA를 감안해 이번 협정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홍콩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 홍콩무역관

EU–캐나다 "우리가 남이가"… '미래동맹' 출범

캐나다 '탈미국' 행보 가속
EU 준회원국 가입도 주목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새로운 전략적 동맹 '미래 동맹'을 출범시켰다. 사진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최근 열린 EU–캐나다 정상회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중)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좌)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PA/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출범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한 것이다. 양측은 경제 ·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EU 준회원국이 되면 관세로 응징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만든 '미래동맹' 출범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0월 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래를 위한 동맹' 출범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 동맹이 EU와 캐나다가 외부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내고, 더 강력한 국가들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 지리적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면서 이번 동맹 출범은 "다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힘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캐나다가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캐나다에 대한 영토적 위협, 유럽의 전통적 대서양 동맹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증폭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미국에 대한 경제 ·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한 것이다.

●동맹 출범 맞춰 다양한 협정 체결 = 양측은 동맹 출범에 맞춰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미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기업들이 더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무역 협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유럽투자은행(EIB)이 캐나다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위성 통신 · 항법, AI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새로운 국경 보안 협정에 합의하고, 국방, 사이버 보안, 북극 안보 및 외국 간섭 대응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유럽 수출 타당성을 검토하고, 캐나다–유럽–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유럽의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캐나다 연구자와 기업에 개방하고, 캐나다의 유럽 '에라스무스' 학생 교류 프로그램 및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 참여도 추진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EU가 마련한 9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대출에 캐나다도 기여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우선 초기 5억 유로를 분담할 예정이다.

●캐나다, EU 준회원국 되나… 트럼프, 강력 견제 = 캐나다는 EU와의 동맹 구축에서 더 나아가 EU의 첫 '준회원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준회원국 가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며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캐나다를 EU의 첫 준회원국으로 만들자고 회원국들에 깜짝 제안했다. 그러나 준회원국 의미가 불명확하고, 사전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메시지라 회원국들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양측의 공동 선언문에는 준회원국이라는 표현 대신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만 "지난 몇 주간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캐나다를 EU와 훨씬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준회원국 지위 안을 거듭 옹호했다.

EU와 캐나다의 밀착에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 "그럴 일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 있어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전방위적 '탈미국' 행보 가속 페달 = 캐나다의 '탈미국' 행보는 EU로만 향하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이보다 사흘 전인 10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체결했다. 양국은 불과 47일간의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협정은 캐나다 의회 비준 등을 거쳐 2027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 전인 9월 23일에는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진전시켰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CEPA를 넘어 아세안 전체와의 FTA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과는 별도 양자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아세안 전체와 협정이 체결될 경우 캐나다는 동남아시아의 제조업·소비시장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기존 미국·중국 중심의 교역구조를 다변화하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2025년 양국 상품교역액은 약 20억 캐나다 달러였다. 캐나다는 에콰도르에 곡물, 비료, 광물연료, 식용채소 등을 수출하며, 에콰도르로부터 코코아, 바나나, 새우, 꽃,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남미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와 무역협정을 보유하게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이던 지난 3월에는 카니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양국은 그동안 정체됐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다시 본격화하고 2026년 말 타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 캐나다의 '탈미국'은 성공할 수 있을까? = 캐나다의 교역 다변화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월 78%에서 2025년 5월 6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

캐나다의 대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시장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의 제조업 공급망이 미국과 긴밀하게 통합돼 있고, 석유 · 천연가스 수출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따라서 캐나다가 추진하는 전략은 미국 이외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것에 가깝다. 결국 캐나다의 통상전략은 '탈미국'보다는 '미국 의존 위험의 분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용석 기자

민주콩고 에볼라 사망자 5000명 넘어서… "속도 빨라"

감염자들 절반 이상이 사망
글로벌 확산 가능성은 낮아



뒤집힌 미 국회의사당 미국 중간 선거일인 11월 3일 워싱턴의 반사 연못에 비친 국회의사당 건물 뒤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4일 오후 10시 기준 개표 결과 상원 54 vs 44(2석 미확정), 하원 239 vs 147(49석 미확정)로 민주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했다. 【워싱턴=AP/뉴시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에볼라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이번 에볼라는 확산 속도가 과거 2014~2016년 사태 때보다 빠르고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 아프리카를 벗어난 감염 사례는 극히 드물고 에볼라 특성상 국제 감염병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에볼라 검사 받기도 전에 숨져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국립 공중보건연구소는 10월 30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1만41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372명으로, 치명률은 51.6%다. 에볼라에 감염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유명을 달리한 셈인데 이는 민주콩고가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을 선언한 뒤 168일 만이다.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이는 2788명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망자 중 3분의 1이 어떤 의료적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에볼라 검사를 받기도 전에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에볼라 확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에볼라가 확산한 2014~2016년 서아프리카 대유행(확진 2만8616명, 사망 1만1310명)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지만, 확산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빠르다. 이번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자이르형이 아니라 희귀한 분디부조형이어서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발병 지역 다수가 반군 장악지역이어서 보건당국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의료진에 대한 주민 불신과 임금 미지급 등 열악한 처우가 겹쳐 확산 방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서아프리카로 확대… 유럽서도 일부 감염 = 지난주 나이지리아에서도 에볼라 감염 사례가 보고돼 아프리카 내 발병 지역이 서아프리카까지 확대됐다. 동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에볼라가 아프리카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 WHO는 8월 14일 재평가에서 민주콩고의 위험을 '매우 높음', 인접국을 '높음',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 및 전 세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이후 10월 공개 자료에서도 이 구분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와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10월 26일 나이지리아에서 스위스로 감염 환자가 이송된 사례가 주목된다. 이 환자는 우간다를 방문했던 스위스 국적 여성이며,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스위스 제네바대학 병원으로 이송됐다. 밀접 접촉자인 남편도 별도로 격리됐다. 앞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 이 사례들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국제 이동과 의료 후송을 통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은 낮아 = 다만 유럽 내에서 광범위한 2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확산 속도는 빠른데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에볼라의 전파 방식 때문이다. 코로나19와 달리 에볼라는 주로 감염된 사람의 혈액 · 구토물 · 대변 · 기타 체액이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직접 접촉하면서 전파된다. 일상적인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잠복기는 2~21일이며,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단순히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될 위험은 낮다. 반면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의료진, 가족, 장례식 참석자에게는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보건 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 격리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면 전파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팬데믹 대응 국제조약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9차 회의를 11월 2일 시작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병원체의 위협은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초 한타바이러스 발병과 현재 진행 중인 민주콩고 에볼라 유행은 이러한 위협을 일깨워준다"고 밝혔다. 그는 팬데믹 조약을 완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미래로 가는 문을 열 열쇠"라며 "마무리 작업을 끝내자"고 각국에 촉구했다.

각국은 지난해 5월 팬데믹 협정에 합의하면서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에 대한 접근과 이를 활용해 개발한 백신 · 검사 · 치료제 등을 어떻게 공유할지를 규정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이용석 기자

중 · 캐나다, '관세면제 2년 연장' 합의… "관계 강화"

중국과 캐나다가 일부 농수산물과 철강 ·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조치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갈등 완화 조치를 연장하며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11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9차 중국 · 캐나다 경제무역공동위원회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밀(유채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 완두콩, 바닷가재, 게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조치를 2년 더 유지한다. 캐나다도 일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같은 기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합의한 무역 갈등 완화 조치의 연장선이다. 왕 부장은 중국 상무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양국의 경제 · 무역 협의가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경제무역공동위원회를 무역 갈등 해결과 경제 협력 촉진의 주요 통로로 활용해 이견은 줄이고 협력은 확대하자"고 말했다. 또 석유 · 가스와 농수산물, 소비재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소재와 첨단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 신흥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두 장관도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가 고무적이라며 경제무역공동위원회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이어 현대 농업과 제조업, 금융서비스, 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와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일본 유통가, 할인보다 기획으로 소비자 발길 잡는다

캐릭터 협업과 지역 맞춤 행사
방문과 구매 이끄는 기획 경쟁



분주한 로봇 11월 1일 중국 중국우정그룹 광둥성 광저우 우편구역센터 장가오(江高)우편물처리센터에서 로봇이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솽스이(雙十一 · 11월 11일)'를 앞두고 장가오 우편물처리센터가 분주해졌다. 직원들과 각종 자동화 분류 설비가 물품이 제때 배송될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광저우=신화통신/뉴시스】

일본 백화점과 대형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곳'보다 '직접 찾아가고 싶은 곳'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J.프론트리테일링그룹의 상업시설 파르코와 KOTRA 나고야무역관이 협업한 JR나고야 다카시마야백화점이다.

●유통의 공식이 바뀐다 = 파르코는 1970년경부터 약 50년간 여름철 대표 판촉 행사로 진행해 온 대형 세일 '그랑바자르'를 올해 처음 중단했다. 가격 할인 대신 인기 지식재산권(IP)과의 협업과 점포별 독자 기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파르코의 올해 7월 입점 매장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다. 한 달 전 나고야에 문을 연 신규 상업시설 하에라의 매출이 포함돼 개업 효과가 일부 반영됐지만 기존 파르코 15개 점포 모두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의류 매출도 9% 증가했다. 대형 세일을 실시한 작년 7월 의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략 전환의 배경에는 구매 시점과 소비 동기의 변화가 있다. 일본 유통업계는 전통적으로 2월과 8월을 매출 둔화 시기로 보고 '니파치(二八)'라고 불렀다. 그러나 2025년 파르코의 전 점포 8월 입점 매장 매출은 대형 세일을 진행한 7월을 상회했다. 별도의 전 점포 캠페인 효과도 있었지만 기존 판촉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길어진 여름으로 계절에 맞춰 의류를 구매하는 패턴이 약해진 점도 계절 세일의 효과를 낮추고 있다. 입점 의류업체 역시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고를 줄이고 정상가격 판매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기준과 업체의 재고 전략이 함께 달라지면서 대형 세일에 의존하던 판촉 방식도 재편되고 있다.

●달라지는 방문 동기 = 가와세 겐지 파르코 사장은 최근 소비행동을 "놀이공원에 다녀온 뒤 기념품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라고 표현했다. 상품 구매보다 재미있는 행사나 볼거리를 계기로 방문하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상품 선택 기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의류업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고 판매 시의 가치까지 구매 판단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가격과 상품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상품 판매만으로 방문을 유도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콘텐츠와 이벤트, 지역 특색 등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캐릭터 IP의 힘 = 파르코가 올해 여름 그랑바자르 대신 내세운 대표 기획은 인기 캐릭터 '치이카와'와의 협업이다.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치이카와, 파르코, 여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영화 개봉과 연계한 포토부스와 참여형 이벤트 등을 운영했다. 파르코는 7월 실적 증가의 배경으로 이 캠페인과 점포별 여름방학 기획을 언급했다.

IP 활용은 상설 매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이케부쿠로 파르코는 본관 지하 2층에 만화 · 애니메이션 관련 매장을 집중 배치하고 점프숍과 '치이카와 랜드' 등을 유치했다. 시부야와 나고야 파르코도 관련 전문점을 집객에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유도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갈 이유' = 파르코는 과거 도쿄의 패션과 문화를 지방 도시에 소개하며 점포망을 확대했다. 그러나 역세권 상업시설과 대형 쇼핑몰,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전국에 비슷한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이에 보편성 · 독자성 · 지역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입지와 고객 특성에 따라 점포 구성과 운영을 달리하고 있다. 우라와 파르코는 식품 슈퍼마켓과 가전 양판점, 서점 등 일상 수요와 밀접한 매장을 갖추고 연간 약 170건의 행사와 지역 기업 참여 이벤트를 연다. 기치조지 파르코는 지역 음악 · 영화 문화에 맞춰 레코드 매장과 소규모 영화관을 운영한다.

가와세 사장은 "시부야점에서 성공한 것을 다른 점포에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파르코의 2025년 전체 15개 점포 입점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455억 엔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시부야 · 우라와 · 센다이 등 7개 점포도 각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귀여움'을 테마로 승부 = 명확한 테마에 맞춰 상품을 구성하는 방식은 한국 소비재를 소개하는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JR나고야 다카시마야는 KOTRA 나고야무역관과 협업해 올해 8월 19~25일 9층 이벤트 공간에서 '살짝 즐기는 한국(ちょこっと韓国)' 팝업 행사를 열었다. 다양한 제품을 나열하기보다 '한국의 귀여움'을 주제로 생활잡화와 디자인 상품을 선별했다.

'떡국누나'의 강아지 오브제와 액세서리, '리빙 크리에이터'의 샐러드 도시락 용기, '코토나'와 '모머위켄드'의 타월 제품 등이 참여했다. 서로 다른 품목을 귀여운 디자인과 부드러운 색감,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라는 공통 콘셉트로 묶었다.

특히 떡국누나의 강아지 오브제는 1700~3500엔대로 소형 생활잡화로서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구매가 꾸준히 이어졌다. 강아지의 표정과 형태를 살린 디자인, 작은 크기에서 오는 소장성, 인테리어 소품과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구매 요인으로 꼽혔다.

행사 매출액은 KOTRA 무역관 내부 집계 기준 일주일간 330만 엔을 기록했다.

무역관 협업과는 별개로 같은 행사에 참가한 리빙 크리에이터의 샐러드 · 과일 보관 용기 '지켜팟'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귀여운 디자인에 내용물의 수분을 분리하는 구조를 적용해 아침에 준비한 샐러드가 점심에 눅눅해지는 불편을 줄인 점이 관심을 끌었다. 디자인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한 기능성이 함께 평가받은 사례다.

●우리 기업 시사점 = 일본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가격 할인보다 매장을 방문할 계기를 만드는 기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파르코는 인기 IP와 지역 맞춤형 점포 운영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형 세일 중단 이후에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기획 중심 집객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소비재도 주제와 상품의 연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짝 즐기는 한국'은 '한국의 귀여움'이라는 주제에 맞춰 상품을 선별했으며, 소규모 팝업에서도 실제 구매가 이어졌다. 떡국누나의 귀여운 디자인과 소형 소품의 활용성, 지켜팟의 수분 분리 기능처럼 상품별 매력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KOTRA 나고야무역관

에티오피아, 내연기관차 수입금지 완화 방안 추진

관세 · 환경 기준으로 수입 억제
전기차 중심 친환경 기조 유지



분화하는 화산 10월 30일 필리핀 알바이주 다라가에서 바라본 마욘 화산이 분화하고 있다. 【다라가=AP/뉴시스】

에티오피아가 2024년 1월부터 시행해 온 내연기관차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할 전망이며 그 배경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자리 잡고 있다. 2003년 가입을 신청한 에티오피아의 WTO 협상은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입금지 조치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면 개방보다 관세 · 환경 기준으로 수입 억제할 듯 = 에티오피아 정부는 금지 이전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관세와 각종 재정 조치로 내연기관 차량의 수입을 억제하면서 전기차의 가격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지역통합부 국제무역협상 담당자인 타게스 물루게타는 지난 5월 현지 언론 더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수입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과거의 수입 구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환경 관련 조치와 과세 등 내연기관차 수입을 억제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WTO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관세와 환경 기준을 통해 내연기관차에 대한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연기관차 수입금지 이전에도 관세와 각종 내국세가 중첩 부과돼왔다. 특히 소비세는 2023년 개정 소비세법에 따라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하고 배기량과 연식별로 차등 부과된다. 향후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한 세 부담 및 환경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실제 수입 확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계 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전기차 조립 생태계 = 내연기관 차량 수입금지 이후 에티오피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현지 정부는 2022년부터 전기차 수입과 현지 조립을 지원하는 차등 관세 및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전기승용차 관세는 완성차(CBU) 15%, 반조립(SKD) 5%, 완전분해(CKD) 키트 면제였으며 부가가치세 · 소비세 · 추가세 면제도 마련됐다. 다만 실제 적용 세율과 면제 요건은 최신 관세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내연기관 승용차 · 삼륜차 · 이륜차의 일부 SKD · CKD 키트로 수입제한 대상이 확대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올해 2월 블룸버그가 에티오피아 정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체 운행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금지 도입 전 1% 미만에서 6%로 높아졌다. 현지 조립라인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BYD · 창안 · JAC · GAC 등 중국계 기업들이 현지 수입업체와 손잡고 업체별로 판매, 현지조립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보도 당시 전기차 조립공장은 17곳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60곳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체제로 바뀌더라도 지난 2년간 형성된 전기차 수입 · 조립 · 유통 생태계가 단기간에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도 전기차 현지 조립 사업 추진 =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의 전기차 현지 생산 사업 추진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 K사는 올해 9월 에티오피아 비앤씨매뉴팩처링그룹, 국내 물류 · 엔지니어링 기업 Y사와 현지 조립생산(KD)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설과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앤시가 공장 부지와 인프라를 확보해 생산시설을 짓고 Y사가 공장 설계와 기술 컨설팅, 생산설비 공급을 맡으며 K사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 등 전기차를 연간 1000여 대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조립공장은 10월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지 생산 차량은 에티오피아 내수뿐 아니라 소말리아 · 케냐 · 우간다 · 르완다 · 지부티 등 동아프리카 주변국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COP32 개최 앞두고 친환경 정책 기조 강화 = 에티오피아는 2027년 11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2)를 개최한다.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 아프리카그룹의 지지를 받아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아비 아메드 총리가 직접 국가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정부 · 민간 · 시민사회 등을 포함해 6만~8만 명으로 예상되는 참가자가 방문할 전망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9월 에티오피아의 COP32 준비에 대한 유엔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에티오피아는 개최국으로서 기후 · 환경 분야의 정책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아비 총리는 9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COP32에 대비한 회원국 간 기후 의제 조율 트랙 신설을 제안했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같은 달 뉴욕 기후주간을 계기로 저탄소 혼합시멘트 확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아디스아바바 상공회의소(AACCSA)도 녹색성장센터를 통해 기업의 환경 대응과 녹색금융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도 전기차 전환과 배출가스 관리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알레무 시메 교통물류부 장관은 9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2026 노르딕-아프리카 전기차(EV) 서밋'에서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같은 달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아디스아바바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대중교통 차량 410대 중 47%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국은 기준 미달 차량에 일정 기간 내 정비를 요구하는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 ·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불안도 전기차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 시사점 = 내연기관차 수입 규제 완화가 곧 시장의 전면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관세와 환경 기준을 통해 내연기관차 수입을 계속 억제할 것으로 보이며 WTO 관련 의무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 수입규제의 관세 체제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시장 접근성은 적용 세율, 대상 차종, 연식 및 환경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수입 허용 여부와 시행일을 공식 지침으로 확인하고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한 전체 세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지 조립 확대 계획과 충전 인프라 수요를 바탕으로 부품 · 설비 · 충전 서비스 사업 기회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공장 확대 목표를 확정 수요로 간주하기보다 개별 사업의 추진 단계와 현지 업체의 조달 구조를 확인해 공급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KOTRA 아디스아바바무역관

한국무역신문 www.weeklytrade.co.kr
발행인·대표이사 : 김석경 편집인 : 김보근
편집위원장 : 강규용 인쇄인 : 현재오 편집디자인 : 강성구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3F - 017호)
구독 : 02-6000-3124 광고 : 02-6000-3116
대표전화 : 02-6000-3119
팩 스 : 0303-3447-3119
E메일 : wtrade07@gmail.com
정가 2,500원 정기구독료 : 1년 100,000원
등록일자 : 2007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 다07698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강남구 GANG NAM GU

걸어서 누리는 일상
10분 도시 강남

